

승강장 썰렁...손님은 없고 택시만 긴 대기행렬

광주 택시요금 인상...현장 둘러보니

“택시 요금이 1000원 오른 첫날부터 이용객이 반 토막 났어요.”

광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된 첫날인 지난 1일 밤 9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승정역 일대. 50여대 택시가 두 줄로 늘어선 승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택시 승강장에는 단 한명의 승객조차 보이지 않았다. 인상된 요금을 의식해서인지 승객들은 양 손에 캐리어를 끄는 등 짐을 가득 들고서도 택시 승강장을 지나쳐 주차장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기 일쑤였다.

광주에서 21년동안 택시기사로 일해 온 정상원(68)씨는 “토요일 저녁은 승객이 많아 하루 평균 20명 정도는 태워야 하는데 이제 고작 10명 태웠다”며 “승정역 택시 승강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 승객을 기다리는 일은 난생 처음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 택시 기본요금(2km 기준)이 지난 1일자로 1000원 인상됐다. 2019년 1월에 3300원으로 인상된 지 4년 6개월만이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달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확정한 때 따른 조치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올랐으며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 기본요금은 39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됐다. 기본요금 외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이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시민들 “1000원 인상에 부담” 시내버스·지하철 등 이용 늘어 승정역 택시 50대 줄지어 대기 기사들 “이용객 반토막” 한숨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 첫 날부터 광주시 택시 기사와 승객 양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승객들은 요금이 크게 올라 택시를 이용하기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으며, 택시기사는 이용객이 반토막났다고 하소연했다.

3년 전 택시 업계에 뛰어들어 정대선(58)씨는 “기본요금 인상에 대학교 방향까지 걸치니 이전보다 승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체감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정씨는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 주말 유흥인구가 많은 장소 인근에서 기본요금으로 단거리를 이동하던 승객들이 많았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며 “고작 요금 1000원이 올랐다고 단번에 승객이 반토막 날 줄은 몰랐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튿날도 상황은 비슷했다. 평소 승객이 많이 몰리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앞에서도 승객을 태우지 못한 택시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45년 경력의 택시기사 김호웅(72)씨는 “당장 오늘 오전에도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택시를 탄 학생



지난 1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 소식에 승객들이 광주 승정역 택시 승강장에서 길게 늘어선 택시를 지나쳐 걷고 있다.

이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말을 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요금을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승객을 떠나게 만들어 택시 업계에 손해를 불러올 것 같아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승객들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택시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졌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1일 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만나러 광주에 온 김화영(여·24)씨는 “서울에서도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른 뒤 택시 타기가 꺼려져 어떻게든 지하철 막차를 쟁겨 타는 습관이 생겼다”며 “부모님도 택시 요금 걱정을 하시면서 꼭 버스를 타라고 신신당부 하셨다”고 말했다.

2일 친구들과 영화를 보려고 광천터미널을 찾은 김지윤(17)양도 “5분만 이용해도 요금이 5000원이 넘어가는 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안 그래도 용돈이 부족한 학생들이 앞으로 택시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화제의 판결

‘건설현장 월레비는 사실상 임금’

대법, 담양 공사업체 반한 소송 기각...국토부는 즉각 반박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월레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광주고법 판결(2월 21일자 광주일보 6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즉각 법원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B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A사는 2016년부터 광주지역 6곳의 아파트 신축공사 및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로부터 형틀·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에 시공사는 계약을 맺은 타워크레인 회사의 기사 B씨 등 16명을 A사의 현장에 보내 건설장비 및 골재를 운반케 했다.

A사는 타워크레인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간의 근무수당 및 월레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 16명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총 6억 54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월레비는 부당이득이라면서 반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가 월레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레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A사의 정구를 기각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월레비의 성격에 대해 “월레비 지급은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봤다. A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레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추후 월레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당한 월레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정지, 처벌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 1조원대 범죄수익금 세탁한 일당 18명 검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대여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총 1조원대의 범죄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범외인 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6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17개를 개설해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또는 사이버도박 조직 등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통장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도 확인됐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고 20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또 수시로 사무실을 옮겼으며, 원격으로 디지털 증거 자료 삭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대포통장 임대 조직에 매달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옛 보상법 따라 보상금 받지 못한 유족 5·18 정신적 손해 소송 항소심서 패소

광주고법 “3년 소멸시효 적용”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배상 미지급이 위헌이라는 결정이후 이어지고 있는 일명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유족들이 이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패소한 이들은 5·18당시 피해를 입었지만 ‘구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구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아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준현 5·18 열사의 형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구 보상법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지 소멸시효(3년)가 적용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동안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배상 미지급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까지의 법률상 장애가 있어 소멸시효가 멈췄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구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존 구 보상법에 명시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구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대상자가 아니고 현재의 결정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비슷한 이유로 5·18 유족 4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1심 판결도 취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Card **은행**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